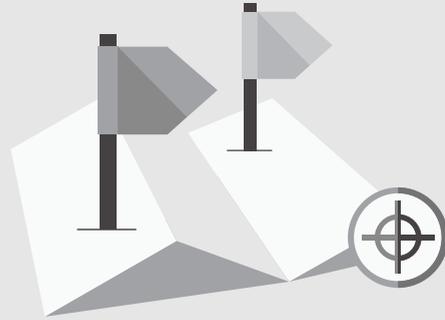


# 이달의 초점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대응 모색



다차원 측면에서 바라본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적 함의  
김태완·최준영

노동 양극화 현황과 과제: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임완섭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이주미

정치·사회 참여의 양극화 실태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및 격차 실태와 정책적 함의

Polarization and Gaps in Income and Assets: Policy Implications

이주미 | 빈곤·불평등연구실 전문연구원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소득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양극화 현상을 자산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소득 양극화 분석 틀을 토대로 자산 양극화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분배 및 격차 현황 등도 함께 들여다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특히 가처분소득에서는 크게 완화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물론 시장소득 격차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소득 관점에서는 양극화보다는 격차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의 관점에서는 자산 지니계수, 자산 5분위 배율 등의 지표들이 소득과 달리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분위별 자산구성비를 통해 자산 양극화 및 격차 발생 구조를 파악해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 1. 들어가며<sup>1)</sup>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중산층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IMF 외환위기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0% 가까이가 지난 50년간 한국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IMF 외환위기’를 지목하였고, 이로 인한 가장 부정적인 영향으로 ‘소득 격차,

1) 이 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연구로 수행된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의 일부(4장 1절)를 재정리한 것이다.

빈부 격차 확대 등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KDI 보도자료, 2017. 11. 14.). 이처럼 양극화는 어떤 사건 혹은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양극화 현상은 불평등 증가, 분배 악화, 빈곤층 양산, 격차 발생 등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동반되며, 이들은 서로 각각의 원인이 되거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양극화 개념은 1980년대 초반 유럽의 한 학자가 소득 분포에서 중산층이 사라지면서 고소득층과 빈곤층으로 양분되는 현상을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한 것에서 시작된 학술적 개념이다(유경준, 2012, p. 1).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소득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이러한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책적 대응이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 자산 격차 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점(Spillerman 2000; Killewald, Pfeffer, and Schachner 2017)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축적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기도 하였으며(전병유, 2019) IMF 외환위기 등 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소득불평등, 소득 격차 해소에 선택과 집중을 해왔다. 이러한 선택과 집중이 소득 양극화 현황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최근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정책이 주

요한 사회정책으로 대두되고 일반 국민들의 자산 격차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 양극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자산 양극화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소득 양극화를 분석한 틀을 토대로 자산 양극화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즉, 이 글에서는 소득 양극화 변화를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자산 양극화 현황에 대해 분석하면서 분배 및 격차 실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sup>2)</sup>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이 자료는 우리나라 소득분배지표를 공표하는 공식자료이며, 소득과 자산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2017년 이후 행정자료 보완을 통해 소득에 대한 정보를 정교화하는 작업을 수행함에 따라 분석에 활용된 2012~2021년(소득 기준 2011~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시계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즉, 통계청 KOSIS를 통해 추출한 수치 외의 분석에서 2012~2016년(소득 기준 2011~2015년)의 경우 조사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고, 2017~2021년(소득 기준 2016~2020년)의 경우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2) '양극화'는 자원의 분포 또는 자원의 사다리에서 최상층과 최하층이라는 2개 극점에 인구의 빈도가 집락된 상태로 정의된다면, '격차'는 (빈부, 임금, 기술 수준이) 서로 벌어져 다른 정도'를 뜻하고, 자원의 분포에서 집단 간 편차를 기술하는 개념으로, 격차는 양극화에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pp. 31-35). 이 글에서는 양극화는 양극화 관련 지수(지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격차의 경우 절대액의 차이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 2. 소득 양극화 및 격차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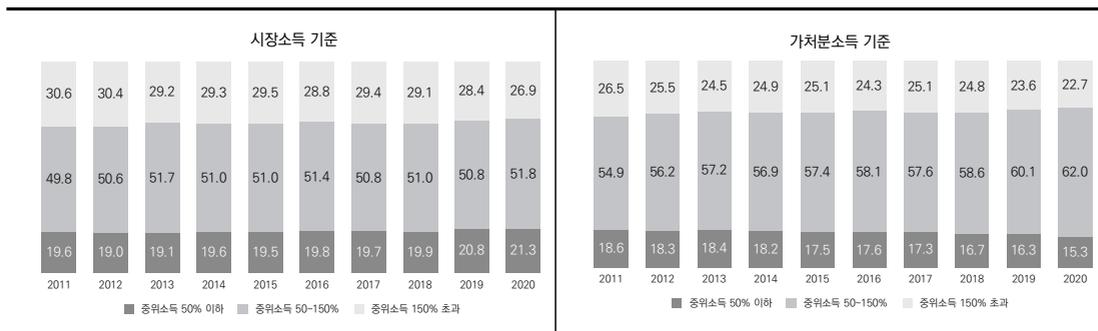
소득 양극화(income polarization)는 ‘중간 소득계층(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득 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민승규, 김갑수 외, 2007, p. 3). 이러한 소득 양극화의 개념은 소득 분포가 고르지 못한 상태, 즉 소득이 개인 혹은 가구들 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소득불균등(혹은 소득불평등)’의 개념과 혼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득 양극화 심화 현상이 반드시 소득분배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즉, 소득불균등이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중산층이 감소할 수 있다. 소득 양극화의 경우 중산층 복원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소득불균등의 경우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지출의 확대를 강조하는 등 문제의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또

한 양극단의 밀집 현상과 함께 양극단의 격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는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소득 양극화는 중산층, 즉 중간계층이 감소해 소득 분포가 양극단으로 몰리는 것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계층(중위 50~150% 사이)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장소득 기준 중간계층 비율은 2011년과 2020년 사이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처분소득<sup>3)</sup> 기준으로 보아도 비슷한 모습이다. 시장소득 기준 중간계층 비중 변화를 보면 소득 양극화 현상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특징적인 점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중간계층의 비중이 증가함과 동시에 중위소득 50% 이하 비율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중간계층이 증가하면서 중위소득 50% 이하 및 150% 초과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

그림 1. 중간계층 분포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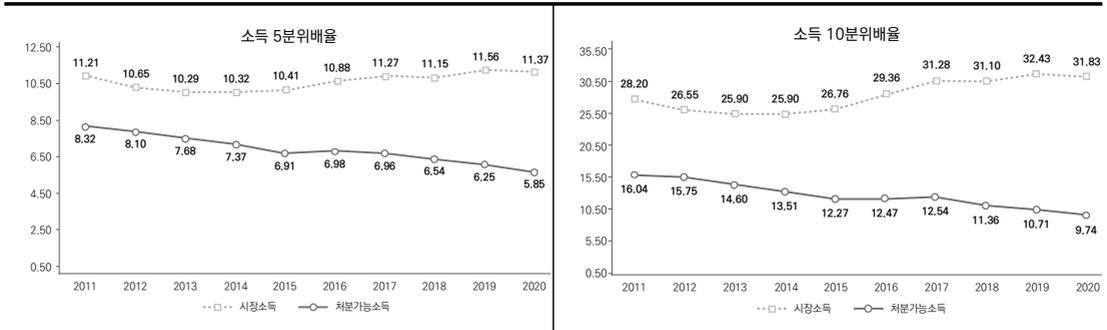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그림 4-1-2] 재인용(p. 197.).

3)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2. 소득분배율

(단위: 배)



주: 소득 5분위 배율 =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소득 10분위 배율 = 소득 상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1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임.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그림 4-1-4] 재인용(p. 199.).

을 보이는 등 소득 기준별로 중산층의 증가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소득 양극화 여부를 간단히 파악할 수 있는 소득분배율에 대해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 분배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가처분소득 기준 분배율은 시장에서의 소득 양극화보다 완화된 모습을 보인다. 특징적인 점은 시장소득 기준 5분위 배율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10분위 배율로 분위를 세분할 경우, 양극단의 소득 차이는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볼 때 분위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은 시장소득에 비해 분위별 격차가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 분위별 균등화 평균소득액을 비교해 보면, 2011년 기준 1분위의 균등화 평균소득은 563만 원으로 5분위와의 격차는 5,746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시점인 2020년의 경우 1분

위와 5분위의 시장소득 평균액의 격차는 7,319만 원으로 2011년과 비교 시 1분위와 5분위 간의 격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분위별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1분위의 연간 소득변동률이 5분위의 연간 소득변동률보다 크지만, 절대액의 차이로 인해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즉, 소득 저분위의 소득 증가 폭이 고분위 소득 증가 폭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소득 절대액 자체에서 발생한 격차로 인해 그 간격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 물론 분배율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그 격차는 좀 더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P90/P10은 소득 10분위 중 9분위 소득의 경계값(P90)을 1분위 소득 경계값(P10)으로 나눈 것으로 이 값이 커질수록 최하위와 최상위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최근 2019년과 2020년 사

표 1. 소득 분위별 균등화 평균소득액 및 분위별 격차

(단위: 만 원)

시장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와 5분위 차이
2011	563	1,440	2,202	3,188	6,309	5,746
2012	614	1,543	2,332	3,329	6,542	5,928
2013	644	1,643	2,473	3,487	6,625	5,981
2014	636	1,650	2,492	3,540	6,565	5,929
2015	644	1,699	2,573	3,675	6,704	6,060
2016	653	1,762	2,664	3,786	7,107	6,454
2017	667	1,840	2,773	3,968	7,514	6,847
2018	689	1,907	2,881	4,110	7,685	6,996
2019	681	1,946	2,973	4,225	7,869	7,188
2020	706	1,980	3,022	4,270	8,025	7,319
가처분소득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와 5분위 차이
2011	681	1,420	2,086	2,939	5,664	4,983
2012	726	1,503	2,199	3,065	5,883	5,157
2013	776	1,616	2,346	3,231	5,962	5,186
2014	798	1,639	2,376	3,279	5,878	5,080
2015	851	1,709	2,458	3,405	5,880	5,029
2016	886	1,776	2,555	3,506	6,180	5,294
2017	927	1,863	2,653	3,671	6,453	5,526
2018	999	1,952	2,764	3,800	6,534	5,535
2019	1,072	2,049	2,877	3,897	6,703	5,631
2020	1,179	2,157	2,999	4,021	6,892	5,713

주: 소득 5분위 = 전체 인구(가구)의 소득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한 그룹에 20%의 인구(가구)수가 포함되도록 5개의 그룹으로 나눈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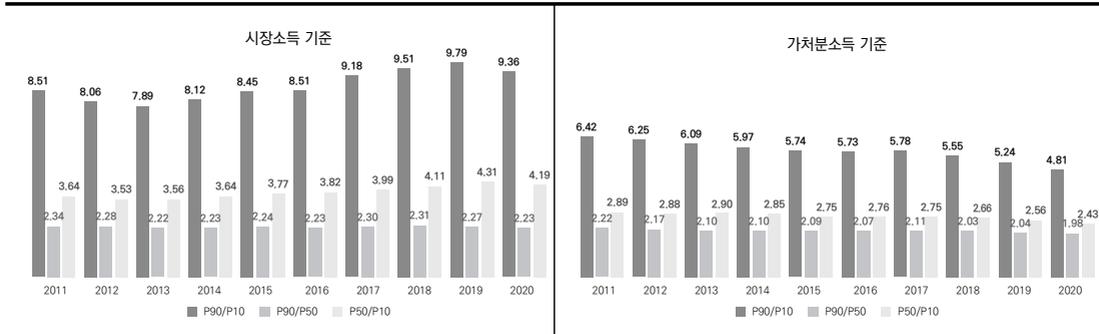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KOSIS), 소득분배지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2022. 6. 13.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이 다소 감소한 모습을 보이나,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감소한 뒤 그 이후 증가하는 추세로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간 시장소득의 격차가 증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앞의 분석에서도 보았듯이 이러한 격차는 공적이전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p90/p50은 소득 10분위 중 9분위 소득의 경계값(P90)을 5분위 소득 경계값(P50)으로 나눈 것으로 중위층과 상

위층 간 소득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소득 하위 계층과 상위 계층 간 모습과는 상반되게 중위 계층과 상위 계층 간 시장에서의 소득 격차는 2011년과 2020년 사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물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나 그 정도는 소득 하위 계층에서보다 크지 않다. p50/p10은 소득 10분위 중 5분위 소득의 경계값(P50)을 1분위 소득 경

그림 3. 소득배율(P90/P10, P90/P50, P50/P10)

(단위: 배)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그림 4-1-7] 재인용(p. 203).

계값(P10)으로 나누는 것으로 중위층과 하위층 간의 소득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이는 P90/P10과 동일하게 시장에서의 두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이러한 격차는 공적이전의 영향으로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1분위(소득 하위 10%) 소득에서 공적이전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 3. 자산 양극화 및 격차 실태

자산 양극화는 소득 양극화와 동일한 개념으로 자산이 최상층으로 몰리는 현상(전병유, 2019, p. 53)을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자산<sup>4)</sup> 기준 분위배율을 분석한 결과, 5분위 배율은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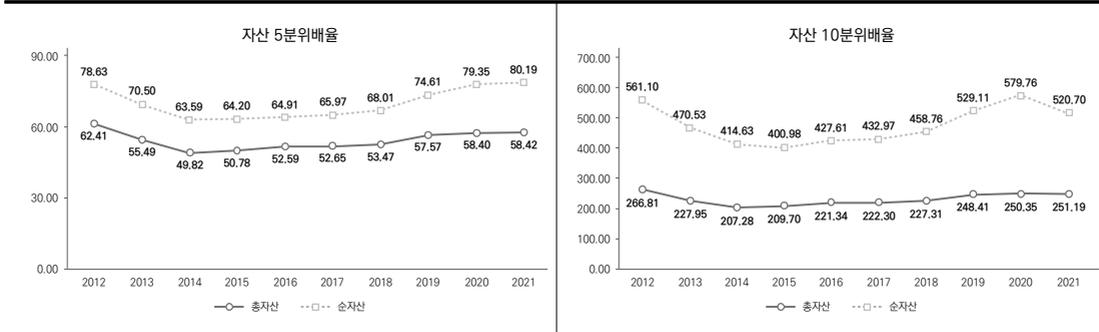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순자산 기준 5분위 배율의 경우 총자산에 비해 2018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10분위 배율의 경우 총자산은 5분위 배율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거나 순자산의 경우 가장 최근 시점인 2019년과 2020년 사이 다소 감소한 모습이다. 그럼에도 순자산 10분위 배율은 500배 이상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각 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로 구분 시 5분위의 총자산은 2021년 기준 약 15억 2,000만 원 수준으로 1분위의 총자산인 2,600만 원의 약 58배이며 순자산 기준 5분위의 약 12억 9,000만 원은 1분위 1,600만 원의 약 80배로 총자산 5분위 배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5분위 배율은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2014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총자산 기준에 비해

4) 자산은 가구 내 공공재와 같은 개념으로, 한 가구원이 사용하는 자산이 다른 가구원의 자산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권일, 김미애, 2021, p. 6)을 토대로 이후의 분석에서는 비균등화 자산으로 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그림 4. [그림 4-1-12] 자산분배율

(단위: 배)



주: 가구 기준 비균등화 자산 활용 분위를 구분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1년(조사 연도) 원자료(2022. 3. 7. 인출)를 활용하여 필자 작성.

표 2. 자산 분위별 평균 자산액 및 분위별 격차

(단위: 만 원)

총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와 5분위 차이
2012	1,628	8,005	17,412	32,939	101,628	100,000
2013	1,806	8,657	18,530	34,229	100,210	98,404
2014	2,024	9,392	19,726	35,712	100,823	98,799
2015	2,036	9,961	20,783	37,224	103,406	101,370
2016	2,063	10,495	22,388	39,720	108,487	106,424
2017	2,164	11,102	23,926	42,194	113,917	111,753
2018	2,333	11,949	25,746	45,416	124,724	122,391
2019	2,260	11,919	25,735	45,924	130,110	127,850
2020	2,307	12,177	26,071	47,396	134,734	132,427
2021	2,597	13,487	28,931	54,538	151,688	149,091
순자산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분위와 5분위 차이
2012	1,091	6,428	14,259	27,375	85,822	84,731
2013	1,188	6,770	14,882	28,189	83,770	82,582
2014	1,324	7,276	15,773	29,266	84,208	82,884
2015	1,346	7,628	16,634	30,581	86,404	85,058
2016	1,388	8,012	17,888	32,763	90,079	88,691
2017	1,435	8,397	18,973	34,832	94,670	93,235
2018	1,528	9,068	20,299	37,528	103,956	102,428
2019	1,454	8,988	20,283	37,743	108,517	107,063
2020	1,418	8,991	20,493	38,773	112,481	111,063
2021	1,603	9,893	22,871	44,936	128,519	126,916

주: 가구 기준 비균등화 자산 활용 분위를 구분함.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영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표 4-1-10>, <표 4-1-12>를 활용하여 재구성.

부채를 감안한 순자산 기준은 배율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며, 순자산 기준 5분위 배율의 경우 총자산에 비해 2018년 이후 증가 폭이 크게 나타난다.

자산 분위별 평균 자산액을 비교해 보면, 2012년 기준 1분위의 총자산은 1,628만 원으로 5분위와의 격차가 10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최근 시점인 2021년의 경우 1분위와 5분위의 총자산 평균액의 격차는 15억 원으로 2012년과 비교

했을 때 1분위와 5분위 간의 격차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의 총자산액을 2012년과 비교해 보면 약 10년 동안 1분위의 총자산액이 1,000만 원 정도 증가한 데 비해 5분위는 5억 원이 증가했다. 자산의 특성상 소득에서보다 절대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격차는 순자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자산의 격차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 보기 위해 분위별 자산 수준 및

표 3. 자산 분위별 자산 구성비

(단위: 만 원)

1분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b>금융자산</b>	<b>76.7</b>	<b>76.1</b>	<b>75.8</b>	<b>75.3</b>	<b>74.5</b>	<b>74.6</b>	<b>73.2</b>	<b>74.1</b>	<b>74.6</b>	<b>74.3</b>
거주주택	11.1	10.8	10.4	11.3	12.2	12.2	12.7	13.0	13.3	13.0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2.1	2.4	2.7	3.0	2.8	2.8	3.2	2.2	2.2	2.3
기타 실물자산	10.1	10.7	11.1	10.3	10.5	10.5	10.9	10.7	9.9	10.4
2분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자산	50.6	51.7	50.3	48.3	46.2	45.5	44.5	45.0	46.0	46.6
거주주택	33.8	32.1	33.8	35.3	37.8	39.2	39.3	39.0	38.6	37.3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7.5	7.9	7.9	7.9	7.8	7.5	8.4	8.2	8.1	8.2
기타 실물자산	8.2	8.2	8.0	8.5	8.3	7.8	7.7	7.8	7.3	7.8
3분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자산	33.3	33.9	32.8	32.5	31.2	30.3	29.5	30.9	31.6	32.9
거주주택	48.4	47.4	48.2	49.3	50.9	51.7	52.1	51.5	50.8	47.5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11.0	11.3	11.8	11.3	11.0	11.2	11.3	10.5	10.8	12.6
기타 실물자산	7.3	7.4	7.2	7.0	6.9	6.9	7.1	7.0	6.8	7.0
4분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자산	24.9	27.0	26.4	26.4	25.9	25.0	25.5	25.2	24.5	22.4
거주주택	49.5	46.5	48.1	49.6	50.7	51.4	50.2	50.5	51.6	54.6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19.0	19.8	19.0	17.6	17.2	17.6	18.3	18.4	18.3	17.9
기타 실물자산	6.5	6.7	6.5	6.5	6.3	6.0	6.0	5.9	5.6	5.2
5분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금융자산	19.4	20.9	20.9	20.9	21.0	21.2	20.5	20.2	18.8	17.6
<b>거주주택</b>	<b>32.8</b>	<b>31.1</b>	<b>31.5</b>	<b>32.3</b>	<b>32.7</b>	<b>33.7</b>	<b>34.7</b>	<b>37.1</b>	<b>38.6</b>	<b>43.2</b>
<b>거주주택 이외 부동산</b>	<b>42.1</b>	<b>41.7</b>	<b>41.3</b>	<b>41.3</b>	<b>41.3</b>	<b>40.4</b>	<b>40.2</b>	<b>38.5</b>	<b>39.0</b>	<b>36.0</b>
기타 실물자산	5.7	6.3	6.3	5.5	5.1	4.6	4.7	4.2	3.6	3.3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그림 4-1-17](pp. 230-231)를 활용하여 재구성.

표 4. 순자산에 대한 계층별 점유율 및 순자산 평균액

(단위: %, 만 원)

구분	점유율			평균액		
	상위 1%	상위 5%	상위 10%	상위 1%	상위 5%	상위 10%
2012	13.2	32.1	46.0	355,131	173,175	124,005
2013	12.7	31.0	44.5	340,441	166,874	119,884
2014	12.1	30.0	43.2	332,491	165,042	119,133
2015	11.9	29.5	42.8	336,190	168,010	121,926
2016	11.4	28.7	42.0	342,117	172,565	126,070
2017	10.7	28.4	41.7	338,951	179,534	131,916
2018	10.8	28.7	42.2	372,109	197,942	145,381
2019	11.4	29.5	43.2	401,648	209,035	152,801
2020	11.5	30.0	43.5	417,089	218,260	158,610
2021	10.9	29.3	43.2	451,351	243,738	179,369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표 4-1-21> 재인용(p. 227.).

구성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분위별 특징으로는 자산 저분위일수록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분위일수록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2012년 시점부터 이러한 경향성은 동일하다. 다만, 1분위의 자산 구성비는 2012년 이후 동일하지만, 최근 들어 5분위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된다. 자산별 절대 금액 수준 또한 차이를 보인다(부표 1) 참조). 이는 자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1분위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반면 5분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시장과 정책에 따라 가격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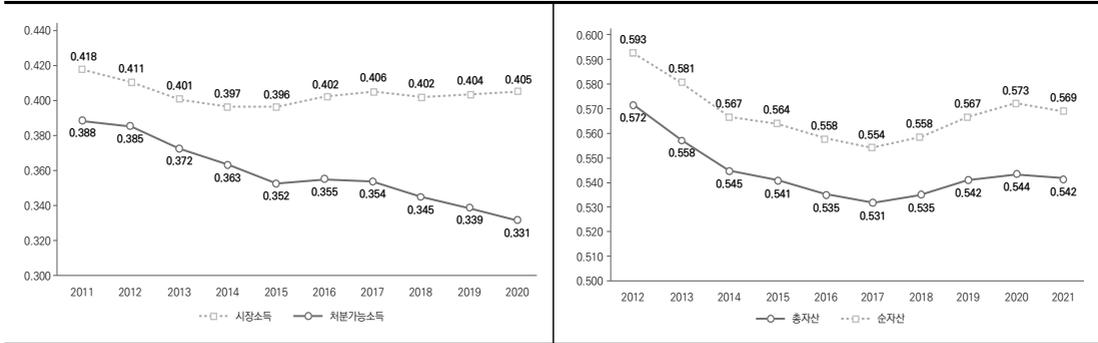
자산 분포의 경우 소득 분포보다 최상층으로

의 집중도가 높다는 점에서 순자산에 대한 계층별(상위 1%/상위 5%/상위 10%) 점유율을 함께 살펴보았다. 순자산 기준 상위 1%의 점유율은 10% 정도로 전체 순자산의 10%를 1%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는 전체 순자산의 30% 가까이를, 상위 10%는 4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위 1%의 순자산 평균액은 45억 1,000만 원 정도로 상위 10% 평균에 비해서도 2.5배 정도 높은 금액이다.

#### 4.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실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

다음으로 소득과 자산 양극화 실태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위해 양극화와 함께 논의되는 불평등 지표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평등도를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sup>5)</sup>를 분석한

그림 5. 지니계수



주: 1) 지니계수 =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2) 소득의 경우 원자료는 통계청(KOSIS), 소득분배지표([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 2022. 6. 13. 인출.)  
 3) 자산의 경우 2011~2015년(조사 연도 2012~2016년) 조사데이터, 2016~2020년(조사 연도 2017~2021년) 행정보완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함.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그림 4-1-1](p. 196.), [그림 4-1-11](p. 215.) 재인용.

결과,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기준 0.418에서 2015년 0.396까지 감소하였다가 이후 2015~2017년, 2018~2020년 사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이후 감소하다 2015~2016년 사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이후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공적이전이 추가되면서 시장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양극화 현상에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자산 지니계수를 살펴보면 2012년 이후 2017년 사이 자산 불평등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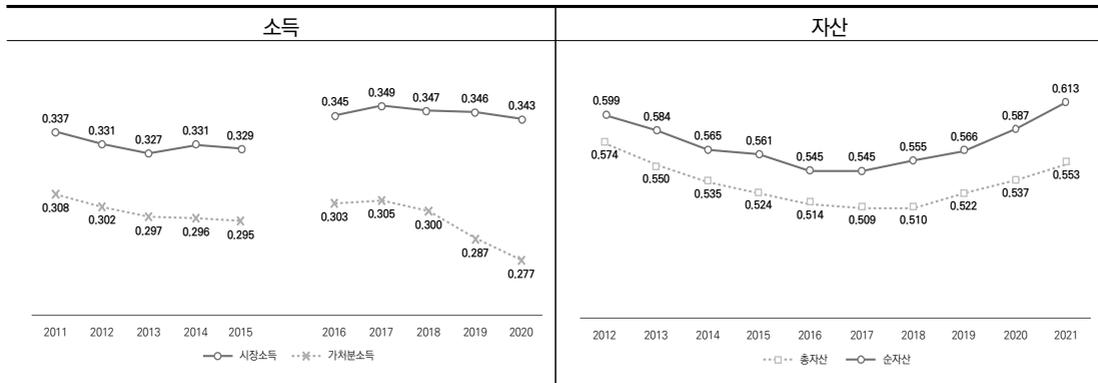
최근 들어 2019년과 2020년 사이 감소하긴 하였으나 2012년 이후 불평등이 완화되는 모습과 상반된 모습으로 2017년 이후 자산 지니계수는 총자산, 순자산 모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Foster and Wolfson(1992)<sup>6)</sup> 양극화 지수를 통해 소득 및 자산 양극화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지수는 중산층 축소 개념을 바탕으로, 중산층이 사라지고 소득 분포가 하층과 상층으로 분리되는 정도로 정의된다. 분석 결과 소득 양극화는 다소 완화되는 반면 자산 양극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니계수 결과와 비교했을 때 소득의 경우 시장소득 기

5)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한다.  
 6) Foster, J. M. Wolfson (1992).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mimeo, Vanderbilt University.

$$FW = 2[2[0.5 - Lorenz(p = 0.5)] - Gini] \frac{\mu}{median}$$

그림 6. The Foster and Wolfson(1992) 양극화 지수



주: 2011~2015년(조사 연도 2012~2016년) 조사데이터, 2016~2020년(조사 연도 2017~2021년) 행정보원데이터 활용, 시계열 해석에 유의해야 함.  
 자료: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표 4-1-25> 재인용(p. 233.).

준 지니계수는 증가하고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소득의 양극화 지수는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모두에서 완화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즉, 소득에서의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앞의 분석에서 살펴봤듯이 분위 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자산에서의 불평등도와 양극화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양극화 지수의 경우 2017년 이후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5. 나가며

지표들을 통해 소득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살펴본 결과 시장소득 기준 분석에서는 소득 격차가 다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가처분소득 기준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

여 주었다. 주목할 것은 소득변동률은 저분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시장소득 기준으로 분위별 절대액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가처분소득의 분위별 격차는 시장소득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양극화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공공부조, 각종 수당 등 현금 지원을 통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에서 격차가 발생하는 현상을 인지하고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소득 격차 해소 방안에도 대해서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자산 양극화 현상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감소하긴 했으나 2017년 이후 자산 지니계수, 양극화 지수가 총자산, 순자산에서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자산 양극화는 현재 진행형이므로 이를 주목하며 자산 양극화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분위별 자산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자산 저분위일수록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산 고분위일수록 거주주택,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다만, 1분위의 자산 구성비는 2012년 이후 최근까지 동일하지만, 최근 들어 5분위의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자산 격차가 발생하는 데에는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이는 자산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1분위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유동성이 있는 자산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반면 5분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경우 관련 시장과 정책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순자산 기준 상위 1%는 전체 순자산의 10%를, 상위 5%는 전체 순자산의 30% 가까이, 상위 10%는 43%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자산층의 자산 점유율이 높은 점 또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 진단해 보면 자산 관점에서는 양극화 문제를 지적할 수 있지만, 소득 관점에서는 양극화에 비해 점차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양극화가 다소 정치적인 언어로 활용되고 있다면 격차는 실제 현상으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 관점에서는 양극화보다는 격차에 주목하고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과 함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득에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방안의 지속과 함께 시장 내에서의 근본적인 격차(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격차 등)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자산 양극화 특히, 부동산에서의 자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실수요자 및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경기부양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

## 참고문헌

- 권일, 김미애. (2021). 분위별 자산·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 **경제현안분석 제103호**. 국회예산정책처.
- 김태완, 이주미, 김기태, 임완섭,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승규, 이갑수, 김근영, 손민중, (2006). 소득 양극화의 현상과 원인. **CEO information**, 547.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유경준. (201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KDI Focus 통권**, (15), 1-8.

- 전병유. (2019). 한국에서의 자산 축적과 자산 격차. *보건복지포럼*(2019. 4), 43-55.
- 통계청(KOSIS), 소득분배지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LF05&conn_path=I3)에서 2022. 6. 13. 인출.
- 통계청(각 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원자료. KDI 보도자료. (2017. 11. 14.).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https://97imf.kr/items/show/3364>에서 2023.01.17. 인출.
- Foster, J. E., & Wolfson, M. C. (1992). Polarization and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Canada and the U.S. *Vanderbilt University*.
- Killewald, A., Pfeffer, F. T., & Schachner, J. N. (2017). Wealth inequality and accumul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43, 379-404.
- Spilerman, S. (2000). Wealth and stratification process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497-524.

부표 1. 자산분위별 자산별 수준

(단위: 만 원)

	자산분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2012	총자산	1,628	8,005	17,412	32,939	101,628
	금융자산	1,249	4,048	5,792	8,208	19,713
	거주주택	215	2,705	8,432	16,312	33,338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35	598	1,914	6,265	42,739
	기타 실물자산	164	654	1,275	2,153	5,839
2013	총자산	1,806	8,657	18,530	34,229	100,210
	금융자산	1,374	4,479	6,277	9,255	20,896
	거주주택	195	2,778	8,787	15,912	31,17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44	688	2,097	6,763	41,833
	기타 실물자산	193	712	1,369	2,299	6,310
2014	총자산	2,024	9,392	19,726	35,712	100,823
	금융자산	1,533	4,723	6,478	9,429	21,063
	거주주택	211	3,178	9,514	17,173	31,740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55	743	2,320	6,794	41,649
	기타 실물자산	224	748	1,414	2,316	6,372
2015	총자산	2,036	9,961	20,783	37,224	103,406
	금융자산	1,534	4,812	6,747	9,810	21,661
	거주주택	231	3,515	10,247	18,452	33,379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62	787	2,342	6,543	42,674
	기타 실물자산	210	846	1,447	2,419	5,692
2016	총자산	2,063	10,495	22,388	39,720	108,487
	금융자산	1,536	4,844	6,980	10,278	22,750
	거주주택	252	3,971	11,403	20,121	35,425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58	814	2,464	6,825	44,826
	기타 실물자산	217	866	1,541	2,496	5,486
2017	총자산	2,164	11,102	23,926	42,194	113,917
	금융자산	1,613	5,046	7,240	10,539	24,160
	거주주택	264	4,354	12,359	21,685	38,402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60	836	2,679	7,428	46,066
	기타 실물자산	227	866	1,648	2,541	5,289
2018	총자산	2,333	11,949	25,746	45,416	124,724
	금융자산	1,707	5,323	7,605	11,561	25,533
	거주주택	297	4,702	13,412	22,809	43,244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74	999	2,913	8,307	50,136
	기타 실물자산	254	925	1,816	2,738	5,812
2019	총자산	2,260	11,919	25,735	45,924	130,110
	금융자산	1,674	5,358	7,964	11,584	26,270
	거주주택	294	4,654	13,252	23,182	48,280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51	978	2,705	8,445	50,050
	기타 실물자산	242	930	1,814	2,713	5,510
2020	총자산	2,307	12,177	26,071	47,396	134,734
	금융자산	1,721	5,600	8,226	11,625	25,342
	거주주택	307	4,699	13,255	24,478	51,971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51	990	2,827	8,660	52,552
	기타 실물자산	229	888	1,763	2,632	4,868
2021	총자산	2,597	13,487	28,931	54,538	151,688
	금융자산	1,929	6,286	9,510	12,212	26,655
	거주주택	338	5,032	13,747	29,755	65,493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61	1,111	3,657	9,749	54,578
	기타 실물자산	269	1,058	2,017	2,821	4,961

자료: 김태완, 임완섭, 김기태, 이주미, 송치호, 김명중, 김영미. (2022). 한국사회 양극화 진단과 사회정책 대응. <표 4-1-24> 재인용(pp. 231-232).

# Polarization and Gaps in Income and Assets: Policy Implications

**Lee, Jumi**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s real estate policy has emerged as a major social policy due to the recent rise in housing prices and the general public's interest in the wealth gap is increasing, this study examines the polarization phenomenon, which had previously been observed mostly in terms of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assets. Since it is difficult to define what asset polarization is, we attempted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asset polarization based on the framework of analyzing income polarization, and also looked at the current status of distribution and disparity. Our analysis of the indicators showed that income polarization has decreased over time, especially in disposable income. To be sure, the disparities that still remain in market income require further examination from an income perspective that focuses more on gaps than on polarization. In contrast to income, indicators such as the asset Gini coefficient and the asset quintile ratio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both total and net assets. We attempted to better understand the structure of asset polarization and gap using the asset composition ratio by quintile and drew some policy implications.